

전남 '유기농 1번지' 명성 지킨다

유기농 인증 4만3000ha 목표 벼 줄이고 과수·채소 비율 높여

전남도가 지난해 말 현재 3만5417ha인 친환경 인증면적을 4만3000ha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벼의 친환경면적(2만 2018ha)을 줄이고 대신 과수(835ha)·채소(860ha)의 인증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인증면적인 인증단계별로는 유기농산물이 2만2856ha로 전국의 61%를 차지했고, 무농약농산물은 1만2561ha다. 현재 무농약으로 인증받은 농산물의 단계를 상향해 유기농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 38개 지원사업에 1604억원(자부담 243억 포함)을 투입할 예정이

다. 주요 사업은 과수·채소 품목 다양화를 위한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사업비 3억2000만원), '남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12억원), '유기농 벵짚 환원사업'(26억원), '유기·무농약 지속적불제'(75억원),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30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매년 분기마다 시·군, 친환경농업협회와 함께 인증 실적을 점검하고 인증면적 감소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는 인증대책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유기농인증면적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시·군별로는 해남군 인증면적이 전국 최대인 4645ha(전남 전체의 13%), 신안군 3535ha(10%), 영암군 2848ha(8%), 진도군 2481ha

(7%), 광양시 2284ha(6.5%), 고흥군 2147ha(6%), 장흥 2049ha(5.8%) 등 상위 7개 시·군이 2000ha 이상을 달성했다.

벼 이외 유기농 1과수 품목은 매실이 169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무화과 33ha, 뽕은감 29ha, 단감 28ha 순이었다. 유기농 채소는 양파와 무가 각각 44ha, 42ha로 가장 넓었고, 대파 25ha, 단호박 23ha 등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22년 7만127ha, 2023년 6만9221ha, 2024년 1월 6만9026ha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한편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개정 지침에 수출형 집적지구 모델 지원을 위한 수출 컨설팅, 글로벌 인증 비용 등 분야 항목의 신설을 건의해 반영시켰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덴마크 해상풍력 협력 포럼 전라남도-덴마크 해상풍력 협력 포럼이 7일 오전 초청 왕인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조성사업 속도

이달 중 도시계획위 심의 거쳐 SPC와 선분양 전환 협약 체결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자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과 관련해 광주시가 신속·투명·공개 3대 원칙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과 협약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7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이달 중순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앞서 지난 2월 27일 광주시는 모든 과정을 신속·투명·공개 원칙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직후 선·후분양 타당성 검증 중간보고 자료를 시 홈페이지와 언론에 우선 공개했다"면서 "그 외 추가 자료는 방대한 개인정보 기록 노출 방지 작업과 참여 기업간 의견 조율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8일 시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중앙공원 1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3.3㎡(평당) 분양가 2425만원 등을 제시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석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증한 뒤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변경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다만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과 마찰을 보인 한양 측이 제안한 3월 말 공개토론회 개최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일 시청서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한양, 타당성 검증을 진행한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일부 참석자가 토론 거부 의사 등을 밝히면서 1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김 본부장은 이번 공개토론회와 관련해 "한양측이 자료 공개 부실이나 토론회 본질과 관계없는 법

적 지분율 변경에 대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마치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며 "한양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아파트 선·후분양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데 이어 8일에는 추가 자료도 공개한다.

한편 오는 2027년 준공 목표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 5027㎡ 부지 내에 공원시설과 비공원 시설을 건축하는 광주 최대의 도심 공원 조성 프로젝트다. 뛰어난 풍경을 품고 있는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어울림 숲과 청년의 숲, 치유의 숲, 우듬지 숲, 예향의 숲, 가족의 숲, 활력의 숲, 기록의 숲 등 8개 테마별 도심 숲 공원을 조성한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총 2772가구 규모의 명품 아파트 브랜드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들어선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유권자 표심 지표...공공·신뢰성 확보돼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걸음 더'

(1) 유권자 마음이 궁금하다, 여론조사 편

4·10 국회의원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전 진행되는 여론조사부터 후보자들이 방송에 나오는 '방송 토론', 선상·재외선거, 사전투표 등 유권자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들 전지이다. 이에 따라 광주일보에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 기획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한 걸음 더'를 마련했다. 총 5회 보도로 다양한 선거 정보와 관련 선거법 등을 소개한다.

◇선거 여론조사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역할 =선거 여론조사는 후보자·정당 선호도 등 유권자의 표심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인이나 정당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정치인·정당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가진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심의회)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공표하도록 해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도 심의위에 등록한 뒤 요구에 따라야 한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중앙뿐 아니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다. 심의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하는 1명, 학계·법조계·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 중앙·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보도 등에 관해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 신고·실시=공표·보도 목적 선거 여론조사를 하려는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는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관할 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조사 시스템, 분석 전문 인력 등 내용을 포함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심의위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심의위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교부한다.

여론조사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선거 여론조사를 하려는 자는 여론조사 개시일 2일 전까지 관할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 크기, 조사 지역, 일시, 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포함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객관성·신뢰성을 유지해야 하고 표본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결과를 왜곡하는 조사·분석은 금지된다. 질문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지 정당, 후보자 없음'이라는 응답 항목을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선거 여론조사 심의와 범죄 조사·조치=법 또는 기준을 위반한 선거 여론조사는 조사나 조치를 받게 된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실제 여론조사에서 A후보자의 지지율이 2위였음에도 불구하고 B당 예비후보자 중 지지율이 1위였다는 것을 들며 '각종 여론조사서 검증된 지지율 1위'라고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행위, 설문 사항에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다른 후보자의 이름보다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여론조사를 한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 문화예술단체 136곳 단체 30억 지원

선정 단체 광주 FC홈 공연 진행도

광주시는 "올해 문화예술 민간단체 136곳에 29억 96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예술 단체 중 야외공연이 가능한 단체를 선정해 프로축구 광주 FC 홈경기장 열리는 날마다 공연을 선보이는 게 특징이다. 또 광주비엔날레 기간에도 다양한 장르의 문화마실을 진행한다.

시는 "2024년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시각예술·공연예술·문학 3

개 분야 136개 단체를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시는 사업수행 역량과 사업내용, 예산 타당성 등 심사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결과는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전일빌딩 245 대강당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 등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